“트렌드 변화 맞춘 특색있는 전통시장 만들자”

시, 양동시장서 민생경제대책회의
고물가 등 소비 위축 활성화 모색
물가 점검·가격표시제 정착 홍보

광주시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25일 양동 광주시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7차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상인연합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해 기관별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 기관들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과 유통업체 증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상권활성화(르네상스)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들은 ▲중소기업계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 캠페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지원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유관기관은 전통시장이 최신 트렌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장보기를 통해 농특산물과 추석명절 물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양동시장에서는 장보기 행사와 연계한 ‘추석명절 물가안정캠페인’도 열렸다. 광주시는 이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과 함께 추석 성수품 등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5일 오전 광주시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시민이 찾고 싶고 즐기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특색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광주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조오섭 “호남고속철 2년 새 평균 12㎜ 가라앉아”

감사원 보수·보강 통보에도 방치
“국민 안전 직결…신속히 나서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 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 요구를 2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 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 이상 가라앉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호남고속철도에서 노반 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45곳, 비율로는 46%에 달한다.

2020년 12월까지 이 구간 최대 침하량은 평균 59.7㎜였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최대 침하량은 72㎜로, 2년새 12㎜ 이상 더 가라앉았다.

지반 침하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구간은 어량교~화배교 구간으로 무려 31㎜가 더 침하되면서 최대 침하량이 174㎜로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허용침하량(30㎜)을 초과한 노반 침하 보수·보강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21년 5월 ‘고속철도 토공노반 건설기준 재정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용역이 2024년 이후까지 지연되면서 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실상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철도공단의 무책임으로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노반 침하를 방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늦장 대응하며 노반 침하가 더 심각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보수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21년 국감에서도 호남고속철도 노반 침하 보수보강 부실시공 업체를 철도공단이 묵인하며 벌점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서울=강성수 기자

신정훈 “연안 침식 심각…예산은 대폭 삭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안정비 사업예산을 당초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 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44.7%인 161개 연안의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침식 정도가 심한 C·D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에서 올해 539억원으로 11.5% 줄었다. 그나마 이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성수 기자

송갑석 “체포안 가결, 영장발부 동의 아냐”

‘가부 고백’ 자기증명 거부
“부끄럽지 않은 선택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넘게 이어져 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송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했고, 이 대표는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마지막으로 회의에참석해 ‘사퇴 입장문’을 읽었다.

송의원은 “나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라면서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나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며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LX,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교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광주시는 2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활용,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LX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광주지역 교통안전시설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LX는 광주시 교통안전시설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광주시는 관리서버를 운영한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타 시·도에 비해 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길용현 기자